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15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7. 15. (제 14 차)	

네텍(주)의 (별도,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손 병 두
제출 연월일	2020. 7. 15.

1. 의결주문

네텍(주)의 제11기(2016.1.1.~2016.12.31.)와 제12기(2017.1.1.~2017.12.31.)의 별도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를 별첨과 같이 보고한다.

2. 제안이유

네텍(주)의 제11기(2016.1.1.~2016.12.31.)와 제12기(2017.1.1.~2017.12.31.)의 별도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를 보고하고, 네텍(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네텍(주)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 매출원가 과소계상 ('16년(제11기) 5,735백만원) ○ 개발비 과대계상 ('16년(제11기) 2,742백만원, '17년(제12기) 6,742백만원) ○ 유형자산 과대계상('16년(제11기) 10,305백만원)
조치 내용 ^{*1,2,3}	○ 증권발행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000, 前미등기임원 000 ^{*4})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 보다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한 조치를 적용

*2 동기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매출원가 과소계상

- 회사는 '16년 초 투자유치 후 '17년 상장을 추진 중 예상했던 당기순이익 목표 (280~300억)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상장일정의 차질을 우려하여

- ‘16년 반기결산시 000(0000)로부터의 생산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5,735백만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상대계정은 외상매입금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 ‘16년 10월 생산보조금 협상이 종료(당초 500만불에서 40만불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16년 12월 00000로부터 5,850백만원을 입금받아 생산보조금이 회수(외상매입금 반제)된 것으로 처리함

○ ‘16년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000)는 전사손익점검회의 과정에서 경영지원팀장(000)과 회계파트장(000)에게 생산보조금을 이익으로 계상할 것을 지시하였음이 문답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 00000 등을 통한 자금거래도 000이 제안하여 경영지원팀장(000) 등과 협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는 감사인 등에게 생산보조금이 회사에 입금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대표이사(000)도 000→00000→회사 자금거래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을 묵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고의**’로 판단[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1)]

나. 개발비 과대계상과 유형자산 과대계상 :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2)]

※ 위법동기 중 ‘중과실’부분은 ‘고의’로 환산·산출하여 종합적으로 ‘**고의**’로 판단함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가중 및 감경적용)

- 기본조치의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감경 :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공시하여 1단계 감경[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2)]

*4 前미등기임원 000(‘18.2.2. 사임)은 ‘16년(제11기) 재무제표 작성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확정되지 않은 생산보조금을 장부에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통보**’조치함

<前미등기임원 000을 ‘검찰통보’조치한 근거>

前미등기임원 000은 ‘16년 회사를 대표하여 000와의 생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로 ①000와의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경영지원팀장과 회계파트장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생산보조금을 이익으로 계상할 것을 지시하였고, ②000000를 통한 자금거래도 본인이 제안하여 경영지원팀장 등과 협의하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 자금거래는 감사인 등에게 생산보조금이 실제 회수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이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상장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 이익과대계상의 유인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로 매출원가 과소계상(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을 주도한 책임자로 판단

* 자문법인인 0000(대표이사 000) 및 000의 배우자가 각각 회사의 주식 123,430주와 16,030주 소유

※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대상이나 ‘18.2.2.자로 사임한 前 재무담당임원 000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前미등기임원 000을 재무담당임원으로 판단한 근거>

前미등기임원 000은 입사 전 다수회사에서 CFO경력을 가진 재무전문가로서, ① ‘16.1.1.자 조직도에 본사 CFO 및 그룹 CFO로 명기되어 있고, ②‘15.12.11.자 ‘16년 정기임원인사명단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기안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고, ③다수의 업무메일을 통해 당시 경영지원팀장(000 이사)과 회계파트장(000 부장) 등에게 별도 및 연결결산실적, 예산, 자금집행 및 구체적인 회계처리 등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한 점이 확인되고 CFO업무 관련 품의서에 결재*1하는 등 통상적인 CF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④000이 ‘본인은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외부인으로 회사의 CFO가 될 수 없고 당시 경영지원팀장인 000이 CFO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문료 지급과 관련한 000 대표의 진술서*2 및 ‘000의 퇴직금 등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000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3 등을 고려할 때, 前미등기임원 000을 재무담당임원으로 판단

*1 ‘16년도 회계감사계약체결(‘16.2.1), ‘15년도 세무조정수수료 지급(‘16.3.31), 연결결산(IFRS) 통합시스템구축(‘16.6.27), 무역어음대출연장(‘16.10.24) 관련 품의서에 결재

*2 000이 세금문제로 인해 급여형태가 아닌 자문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

*3 000은 본인의 업무지시를 받은 중간관리자일뿐 전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리결과(의결일 : ‘19.10.15.)

1) 보고내용

☐ 지적사항

-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16년(제11기) 5,735백만원)
-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 ('16년(제11기) 2,742백만원, '17년(제12기) 6,742백만원)
-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16년(제11기) 10,305백만원)
- 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 (위반연도 '16년(제11기)과 '17년(제12기))

□ 조치내용

- 감사인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 지정제외점수 60점
- 공인회계사 000(OOOO) : 주책임자, 담당이사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4시간
- 공인회계사 000(OOOOO)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관련 :

⇨ (舊양정기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 (新양정기준)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 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 관련 :

⇒ (舊양정기준)

(위 반 동 기) 독립성위반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명백한 법규 위반이자 회계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판단

(위 반 중 요 도) 재무제표의 일부만을 대신 작성하여 준 행위임을 고려시 독립성 훼손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위반중요도는 “보통”으로 적용

⇒ (新양정기준)

(위 반 동 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구축·운영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위 반 중 요 도) 재무제표의 일부만을 대신 작성하여 준 행위임을 고려시 독립성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위반중요도는 ‘보통’으로 적용

감사인과 보조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하였고, 담당이사에 대해서는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함

감사인에 대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기본조치에 1단계 가중(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 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한 조치와 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기본조치를 합산하여 조치하고, 담당이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기본조치에 1단계 감경(수정공시조력)한 조치와 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기본조치를 합산하여 조치하였으며, 보조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기본조치에서 1단계 가중(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 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 및 1단계 감경(보조책임자)하여 조치함

4. 참고사항

가. 제6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0.5.7.)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붙임1)

(별지)

네덱(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네덱(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네덱(주)

- 대표이사 : 000,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 000 000 000 0000

☐ 000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 0000 0000(000, 0000 0000000000)

☐ 000 [前미등기임원]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0, 0000 0000(000, 00000 000000)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 네텍(주)는 조치일로부터 4개월간(2020.7.15.~2020.1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한다.
- 네텍(주)는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와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네텍(주) 및 동사의 대표이사 000, 前미등기임원 000의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네텍(주)(이하 ‘회사’)는 제11기(2016.1.1.~2016.12.31.)와 제12기(2017.1.1.~2017.12.31.)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매출원가 과소계상

-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생산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16년(제11기)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5,735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개발비 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부서 이외 부서에서 발생한 급여와 감가상각비 중 개발과 직접 관련

되지 않은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화하여 '16년(제11기)과 '17년(제12기)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각각 2,742백만원과 6,742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유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15년(제10기) 중 OOOO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16년(제11기) 연결재무제표상 사업결합이전 OOOO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음에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함에 따라 '16년(제11기) 10,305백만원의 유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14와 1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 66과 67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하고,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업무규정」 제13조, 제22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를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별표7의 조치등의 기준(이하 "양정기준")에 따라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경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별첨)

네텍(주)의 [별도, 연결]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1. 감사인 지적사항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네텍(주)(이하 ‘회사’)의 제11기(2016.1.1.~2016.12.31.)와 제12기(2017.1.1.~2017.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16년(제11기) 5,735백만원)

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생산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5,735백만원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매출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16년(제11기) 2,742백만원, ‘17년(제12기) 6,742백만원)

회사가 개발부서 이외 부서에서 발생한 급여와 감가상각비 중 개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화하여 ‘16년(제11기)과 ‘17년(제12기)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각각 2,742백만원과 6,742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개발비의 실재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16년(제11기) 10,305백만원)

회사가 ‘15년(제10기) 중 OOOO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16년(제11기) 연결재무제표상 사업결합 이전 OOOO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환입할 수 없음에도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함에 따라 10,305백만원의 유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독립성의무 위반 [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舊 외감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의 ‘16년(제11기)과 ‘17년(제12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사를 대신하여 연결현금흐름표를 작성함으로써 舊외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조치내용

□ 감사인 : 00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 지정제외점수 60점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000(0000) : 주책임자, 담당이사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4시간
- 공인회계사 000(00000) :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관련 :

⇨ (舊양정기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 (新양정기준)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 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 관련 :

⇨ (舊양정기준)

(위 반 동 기) 독립성위반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명백한 법규 위반이자 회계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판단

(위 반 중 요 도) 재무제표의 일부만을 대신 작성하여 준 행위임을 고려시 독립성 훼손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위반중요도는 **“보통”**으로 적용

⇨ (新양정기준)

(위 반 동 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구축·운영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위 반 중 요 도) 재무제표의 일부만을 대신 작성하여 준 행위임을 고려시 독립성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위반중요도는 **“보통”**으로 적용

감사인과 보조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하였고, 담당이사에 대해서는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함

감사인에 대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기본조치에 1단계 가중(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 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한 조치와 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기본조치를 합산하여 조치하고, 담당이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기본조치에 1단계 감경(수정공시조력)한 조치와 재무제표 작성지원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기본조치를 합산하여 조치하였으며, 보조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기본조치에서 1단계 가중(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 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 및 1단계 감경(보조책임자)하여 조치함

관 계 법 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생략)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2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제20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⑤ (생략)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2.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안전상정 요청 등) ① (생략)

② 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증선위에 안전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53조 (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2. (생략)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제54조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예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가·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 (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 (감리업무의 위탁) ① 영 제9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회사(감독원의 감리대상기간에 한한다)

② (생략)

③ 증선위는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감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해당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제75조 (권한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위탁한다.

1.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감리실시 검토 등 감리업무 집행
2. 영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집행
3. 제59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4. 제64조에 따른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의 사후관리 집행
5. 제33조제2항,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 업무 및 의견제출접수

⑤ 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감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 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 략>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④, ⑦, ⑧ <생 략>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등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내용을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제42조에 따른 재심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없으나 회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심(再審)을 요구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다.

부칙<제2019-13호,2019.4.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제1036호(자산손상)

114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문단 117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한다. 이때 해당 증가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이다.

117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38호(무형자산)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6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67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감리2본부
연락처	02-2100-2695	02-3149-0365